

#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과 군사력 평가\*

朴 榮 濬  
(국방대학교 교수)

1. 머 리 말
2. 일본 안보전략의 새로운 방향
3. 일본 군사력의 역할과 성격
4. 일본 군사력의 평가
5. 맺 음 말

## 1. 머 리 말

군사력이란 무엇인가? 군사력은 개별국가가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발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군사력은 정치외교력, 경제력, 에너지자원 등과 더불어 국

\* 본 논문은 2006년 5월 26일 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가 주최한 국방안보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력을 구성하는 불가결한 요소의 하나가 된다. 군사적 수단은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구성요소가 변화되어 왔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전통적 군사수단인 육·해·공군의 전력뿐만 아니라 핵과 대륙간탄도탄 등의 전략무기, C4I체제, 위성연락망 및 정보자산 등이 군사력을 구성하는 첨단 군사적 수단으로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를 방불케 하는 근현대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는 자국의 생존과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부단하게 국력의 증강, 특히 군사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sup>1)</sup> 동시에 각국은 자국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협요소를 식별하고,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자국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기준을 얻기 위해 주변 경쟁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의 평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잠재적 경쟁국들의 군사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는 훌륭한 정치와 전략의 필요조건 중의 하나라도 간주되어 왔다.<sup>2)</sup> 따라서 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각국의 군사정세와 군사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은 보다 효율적인 국방개혁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의 국가적 생존과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평화번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불가결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21세기 일본의 군사력 현황을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그간 각별한 관심이 기울여져 왔다. 일본 군사력을 어떤 입장에서 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일본은 국

1) 서구의 주요 국가들이 군사력 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근대국가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서울: 나남출판, 1996) 등을 참조.

2) 예컨대 손자(孫子)는 병법의 시계(始計)편에서 장수된 자라면 道天地將法の 다섯 가지 요소를 세세하게 비교하여 그 정황을 살펴야 하며, 피아(彼我)의 정치와 군제, 장수의 유능과 무능 등의 여부를 잘 관찰하여 판단한다면 전쟁의 승패를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孫子, 『孫子兵法』 김광수 역주(책세상, 1999), 24-26, 45쪽 등을 참조. 김광수 교수는 손자병법 시계편의 七計가 현대적 개념으로 풀이한다면 피아의 국력과 군사력을 비교평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같은 책, 31쪽 참조.

내에 존재하는 반군사문화(anti-militarism) 때문에 군사대국이 되지 않을 것이고 주변국을 위협할 정도의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의이다.<sup>3)</sup> 둘째는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국가전략을 변화시키면서 보통국가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나, 그 군사력은 군국주의 시대와 달리 미일동맹 관계와 전수방위 체제하의 제약 속에서 현실주의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sup>4)</sup> 셋째는 일본은 이미 세계 유수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이 같은 증강된 군사력은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주창했던 전전 일본의 군대처럼 군국주의에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sup>5)</sup> 이 같은 견해들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에 피해를 당한 역사의 기억으로 인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군사대국화 및 군국주의에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전 일본은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등의 전승국으로 부상하면서 대만과 한반도, 나아가 남양군도와 동남아 및 만주 등을 식민지로 장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치유신 이후 일본이 부국강병을 슬로

3) Thomas U. Berger, "From Sword to Chrysanthemum: Japan's culture of anti-militar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4(Spring 1993); Peter J. Katzenstein, *Cultural Norms & National Security: Police and Military in Postwar Japan*(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Peter J. Katzenstein and Nobuo Okawara, "Japan, Asian-Pacific Security, and the Case for Analytical Eclectic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3(Winter 2001/02) 등을 참조.

4) Jennifer M. Lind, "Pacifism or Passing the Buck?: Testing Theories of Japanese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1(Summer 2004), pp. 92-121. 박철희,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미일동맹 및 위협인식의 변화와 일본방위정책의 정치", 『국제정치논총』 제44집 1호(2004 봄); 박영준, "인간, 국가, 국제체제, 그리고 일본의 전쟁: 근대 일본의 전쟁원인을 통해본 21세기 일본안보정책 평가", 『국제정치논총』 제45집4호(2005 겨울) 등을 참조.

5) 학계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시하는 연구로는 김경민 『어디까지 가나 일본 자위대』(아침바다, 2003) 참조. 김경민 교수는 예컨대 일본이 1999년에 도입을 결정한 공중급유기가 일본이 공격적 혹은 대외팽창전략으로 변모하는 분수령이 되는 무기체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같은 책, 31쪽. 이 같은 인식은 한국 저널리즘에서 쉽게 발견된다. 예컨대 『동아일보』, 2003년 7월1일 사설, "일, 국방군 만들어 뭉개자는 건가" 등을 참조.

건으로 내세우면서 건설한 강력한 육군과 해군이 제국주의의 첨병으로 역할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대적인 사관양성제도, 육군대학 등의 고급 교육기관과 참모제도, 그리고 제로전투기와 전함 야마토 등 일급의 군 장비들을 생산해 낸 군수산업 등을 가진 육·해군이 일본의 제국주의를 가능하게 한 첨병이었던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견인한 제국 육·해군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전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본의 군사력 강화 및 군사역할 확대는 자연스럽게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독도 주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의 파견 문제로 인해 한·일 간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고 그에 따라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체결 이후 우리의 긴밀한 우방이 되어왔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우리와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과도 일본은 동맹을 맺고 있다.<sup>6)</sup> 따라서 일본 군사력의 평가에 있어 감정적인 평가보다는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에 입각한 보다 객관적인 입장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일본의 군사력을 육·해·공 자위대, 전략 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지휘통제시스템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군사력이 어떠한 전략개념하에 운용될 것인지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본의 군사력 건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것이다.

6) 빅터 차는 이 같은 한일관계가 유사동맹관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빅터 차, 『적대적 제휴』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 2. 일본 안보전략의 새로운 방향

### (1) 21세기 안보환경 평가

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은 국내적으로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반적 방위력을 갖추고,<sup>7)</sup> 대외적으로는 미일동맹의 기초하에 주로 구소련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한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를 거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일본은 새롭게 전개되는 안보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결정자들은 21세기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일본에 대한 안보위협요인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을 가장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문서는 2004년 12월에 발표된 “방위계획 대강”이다.<sup>8)</sup> 방위계획 대강은 9·11 이후 국제질서에서는 비국가주체에 의한 테러리즘의 확산이나 대량파괴무기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일 안전보장환경에 관해서는 미국의 9·11테러에 보이는 것과 같이 종래와 같은 국가간에 있어 군사적 대립을 중심으로 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테러조직 등 비국가주체가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확산의 진전, 국제테러조직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과,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태에의 대응은 금일 국제사회가 직면

7) 기반적 방위력이란 스스로가 힘의 공백이 되어 오히려 지역질서의 불안정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개념이다.

8) “방위계획 대강”은 방위청이 주도하여 작성하는 방위정책 관련 최상위 문서이다. 방위계획 대강은 냉전기인 1976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1995년에 개정되었으며, 2004년에 다시 새롭게 작성되었다.

한 과제이다.<sup>9)</sup>

방위계획 대강은 동북아 지역질서에서는 구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에 북한의 핵개발 추진과 중국의 군사력 근대화가 새로운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이 존재, 또한 다수 국가가 군사력의 근대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은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배비, 확산 등을 행함과 동시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은 지역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 됨과 아울러, 국제적 확산방지의 노력에 대한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 ... 이 지역의 안전보장에 큰 영향력을 갖는 중국은 핵미사일 전력이나 해공군력의 근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해안에 있어 해양활동의 확대 등을 꾀하고 있고, 이러한 동향에는 금후에도 주목해갈 필요가 있다.

즉 21세기 초기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방침을 담은 2004년 방위계획대강은 이전의 대강(大綱)과 달리 새로운 위협요인으로서 비국가주체에 의한 테러리즘 및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제기하였고, 동아시아 지역 레벨에서는 구소련을 대체하여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동향을 위협요인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계획 대강에서 표명된 안보정세 평가 및 위협요인 제기는 외교안보정책에 관련된 다른 문서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방위계획 대강 작성과 병행하여 2004년 4월 29일에 고이즈미 수상이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를 조직한 바 있다.<sup>10)</sup> 그 멤버들이 6개월 이상의 공동 연구를 거쳐 발표한 정책제언 문서

9) 『平成17年度以後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04. 12. 10)(<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4/1210taikou.html>). 이하 특별한 인용이 없는 한 방위계획 대강은 이 문서에서 인용한다.

10) 간담회의 좌장에는 아라키(荒木浩) 동경전력고문, 위원으로는 사토(佐藤謙)전 방위사무

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냉전 종결에 의해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무력침공이 행해질 가능성은 대폭 저하되었다. ... 그러나 이 지역에는 2개의 핵보유국(러시아, 중국)과 핵무기 개발을 단념하고 있지 않은 국가(북한)가 존재한다.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배비는 일본으로서 직접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타이완 해협 양안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 일본 주변에 있어 자원개발과 기타 문제를 둘러싸고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sup>11)</sup>

위 문서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관련 브레인들은 특히 북한의 핵개발 추진에 대해 비상한 주의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가 동북아 각국의 군사정세에 대해 분석한 『동아시아전략개관 2004』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일본 전토를 공격할 수 있는 노동과 대포동 미사일 175-200기를 배치하였고, 2005년부터 우라늄형 핵개발시설의 운전이 이루어지면 연간 2개 이상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12)</sup>

이같이 일본의 외교안보 관련 정책결정자 및 전략가들은 21세기를 맞게 된 일본의 안보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고, 비국가주체에 의한 테러리즘과 대량파괴무기 확산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이 대두했다고 인식할 뿐 아니라, 지역수준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해공군력 근대화 같은 동향이 일본의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안보정세평가 속에서 일본은 어떤 안보전략을 추구하고 있는가.

차관, 張富士夫 토요타사장, 西元徹也 전 통합막료회의 의장, 樋渡由美 상지대학 교수, 古川貞二郎 전 내각관방 부장관, 柳井俊二 전 주미대사, 山崎正和 동아대학장, 五百旗頭眞 고베대학 교수, 田中明彦 동경대학 교수가 선임되었다.

11) 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 『未来への安全保障・防衛力ビジョン』(2004. 10).

12) 防衛庁防衛研究所編, 『東アジア戦略概観2004』(2004), 제1장 참조.

## (2) 일본 안보전략의 새로운 모색

2004년 방위계획 대강은 일본 안보전략의 두 가지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1목표는 일본에 직접 위협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위협이 실제적으로 미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2목표는 국제적 안보환경을 개선하여 일본에 위협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전수방위를 표명하고 있는 일본이 자국만의 안보확보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 안보환경의 개선이라고 하는 글로벌한 범위에서 안보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수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위협의 발생확률을 저하시켜 재외 일본인이나 기업을 포함해 일본에 위협이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국제안보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 같은 안보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위계획 대강은 ①일본 자신의 노력, ②동맹국과의 협력, ③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세 가지 방식이 적절하게 통합되고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본 자신의 노력이란 내정의 안정을 통해 안보의 기반확립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방위력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전후 일본이 일관되게 표명해 왔던 전수방위의 원칙, 타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원칙,<sup>13)</sup> 문민통제 원칙, 비핵3원칙<sup>14)</sup> 등은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일본 독자의 힘만으로 추구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익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13) 군사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원칙은 1977년 당시 후쿠다 수상의 동남아 순방 연설 중에 표명된 바 있다.

14) 비핵3원칙은 핵을 제조, 보유, 반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수상에 의해 표명된 바 있다.

협력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에 의해 자국의 안전보장 뿐 아니라 국제적 안보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비핵3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일본은 상대국으로부터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안보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그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할 군사력은 어떤 방침 하에서 어디까지 추구되어야 할 것인가?

### 3. 일본 군사력의 역할과 성격

이전의 방위계획 대강에서 일본은 자국이 추구해야 할 군사력(방위력)의 기준으로서 기반적(基盤的) 방위력이라는 개념을 표명해 왔다. 기반적 방위력이란 197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sup>15)</sup> 스스로가 힘의 공백이 되어 주변지역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협요인이 다양화된 21세기 안보환경에서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반적 방위력의 기준에 부응하여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문제인식이 외교안보 정책결정자들의 사고 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는 자위대가 보유해야 할 능력으로서의 기반적 방위력이라는 생각은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기반적 방위력의 개념은 국가로부터의 위협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비국가주체들이 일으킨 테러 등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 종래의 기반적 방위력의 사고로 대응하기가 곤란해졌다는 것이다.<sup>16)</sup> 그러나 기반적 방위력의 개념을 보완, 변경하는

15) 기반적 방위력 개념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田中明彦, 『安全保障: 戦後50年の模索』(読売新聞社, 1997), 245-260쪽 참조.

16) 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 『未来への安全保障・防衛力ビジョン』(2004.10), 6쪽.

작업이 오히려 그 이전의 위협대응형의 소요방위력 개념으로 복귀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간담회 보고서는 새로운 방위력의 개념은 다양한 위협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위력 구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대안으로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간담회의 멤버들이 제기한 문제의식 및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개념은 방위계획 대강의 문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방위계획 대강은 “금후의 방위력에 관해서는, 새로운 안전보장환경하, 기반적 방위력 구상의 유효한 부분은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금후 우리나라 방위력에 관해서는,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 및 다목적성을 구비하고, 군사기술수준의 동향에 기반한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능력에 지탱되는 다기능, 탄력적인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자위대가 갖추어야 할 군사력의 성격은 종전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간담회 보고서에서 제시한바 추가적으로 다기능 탄력적 실효성 있는 방위력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는 2004년 방위계획 대강 공표와 동시에 결정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 2005-2010)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sup>17)</sup> 중기방에 따르면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이란 새로운 위협 및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의미한다. 예컨대 ①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② 게릴라 및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③ 도서부(島嶼部)에 대한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④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및 영공침공에 대처하고, 무장공작선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⑤ 대규모 특수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의미한다. 즉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을 갖춘다는 것은 탄

17) 『中期防衛力整備計劃(2005-2010)』. 이 문서도 2004년 12월 10일에 일본 안전보장회의 및 각의결정을 거쳐서 공표되었다.

도미사일 공격의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이지스 호위함이나 패트리엇 등 탄도미사일 방위시스템의 정비, 게릴라 및 특수부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장갑기동차나 다용도 헬기, 도서부에 대한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수송헬기 및 공중급유수송기나 지원전투기, 주변 해공역을 감시할 수 있는 고정익초계기나 조기경계관제기, F-15전투기 등의 전력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21세기 일본은 안보환경을 재평가하면서 새로운 위협요소들을 식별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의 기초를 재정립하면서, 갖추어야 할 군사력의 기준으로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에 더해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 4. 일본 군사력의 평가

### (1)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검토

21세기 들어와 일본은 안보정세를 재평가하고 그에 대응하여 일본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의 방향 및 획득목표를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이란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을 구현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가 추구해야 할 군사력의 규모와 주요 장비 등을 방위계획 대강의 별표와 중기방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절에서는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sup>18)</sup> 2004년 방위계획대강에서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가 각각 보유해야 할 군사력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 <別表>이다. <표 1>은

18) 별표가 확정되기까지 일본 정부 내부에서 진행된 정책결정과정에는 박영준,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군사논단』 제42호(한국군사학회, 2005년 여름) 참조.

<표 1> 「방위계획대강」別表의 추이

		1978년 방위계획대강	1995년 방위계획대강	현 중기방 완성시(2005년)	2004년 방위계획대강목표
육 상 자 위 대	편성정수	18만인	16만인	16만 6,000인	15만 5,000인
	평시지역배비	12개 사단	8개 사단 6개 여단	9개 사단 4개 여단 1개 혼성단	8개 사단 6개 여단
	기동운용부대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단 1개 헬리콥터단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단 1개 헬리콥터단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단 1개 헬리콥터단	1개 기갑사단 中央應집단
	지대공유도탄부대	8개 고사특과군	8개 고사특과군	8개 고사특과군	8개 고사특과군
	전차 및 화포	1,200량	전차 900량 약 900문	930량 약 910문	약 600량 약 600문
해 상 자 위 대	호위함부대 (기동운용)	4개 호위대군	4개 호위대군	4개 호위대군	4개 호위대군 (8개 대)
	호위함부대(지방대)	10개 대	7개 대	7개 대	5개 대
	잠수함부대	6개 대	6개 대	6개 대	4개 대
	소해부대	2개 掃海隊群	1개 掃海隊群	1개 掃海隊群	1개 소해대군
	초계기부대				9개 대
	호위함	약 60척	약 50척	52척	47척
	잠수함	16척	16척	16척	16척
	작전용 항공기	220기	170기	170기	약 150기
항 공 자 위 대	항공경계관제부대	28개 경계군 1개 비행대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비행대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비행대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 (2개 비행대)
	요격전투기부대	10개 비행대	9개 비행대	9개 비행대	전투기부대 12개 비행대
	지원전투기부대	3개 비행대	3개 비행대	3개 비행대	
	항공정찰부대	1개 비행대	1개 비행대	1개 비행대	1개 비행대
	항공수송부대	3개 비행대	3개 비행대	3개 비행대	3개 비행대
	지대공유도탄부대	6개 고사군	6개 고사군	6개 고사군	6개 고사군
	공중급유수송부대				1개 비행대
	작전용 항공기	430기	약 400기	약 390기	약 350기
	이 가운데 전투기	350기	약 300기	약 290기	약 260기(216)
탄도미사일방위 주요 장비, 기간부대	이지스시스템탑재 호위함				4척
	항공경계관제부대				7개 경계군 4개 경계군
	지대공유도탄부대				3개 고사군

2004년 방위계획대강에서 제시된 별표(別表)를 1976년과 1995년 방위계획대강의 별표와 각각 비교한 것이다.

<표 1>를 보면 2004년 방위계획대강에서 제시된 군사력 보유목표는 종전의 방위계획대강에 비해 육·해·공 자위대의 기간 장비, 즉 전차, 화포, 호위함, 해상자위대의 작전용 항공기, 항공자위대의 작전용 항공기 및 전투기가 대폭 삭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에 육상자위대의 특수부대인 중앙즉응집단, 항공자위대의 공중급유 수송부대,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위를 위한 기간부대가 신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방위계획대강은 종전 자위대의 기간 장비들을 대폭 감축하면서, 새롭고도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부대의 신편을 적극 반영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각 중기방 전력증강을 위한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비교

중기방 우선 순위	1991-95년도 중기방 <주요사업>	1995-2000년도 중기방 <주요사업>	2001-05년도 중기방 <자위대 능력 주요사항>	05-10년도 중기방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 대응>
1순위	방공능력	방공능력	방공능력	탄도미사일 공격에의 대응
2순위	주변해역방위 및 해상교통안전확보능력	주변해역방위 및 해상교통안전확보능력	주변해역방위 및 해상교통안전확보능력	게릴라 및 특수부대 대응 능력
3순위	착상륙침공대처능력	착상륙침공대처능력	착상륙침공대처능력	도서부침략 대응능력
4순위	수송력, 기동력	수송력, 기동력	게릴라에 의한 공격 대처능력	주변해공역의 경계감시 및 영공침공대처 및 무장공작선에의 대응
기 타	정보지휘통신능력 계진능력 교육훈련체제 기술연구개발 등	정보지휘통신능력 계진능력 교육훈련체제 구난체제 등	재해구원 在外국민 수송 정보능력 경계감시능력 정보통신능력 기동력 수송력 등	대규모 특수제해 본격적 침략사태

<표 2>는 1990년대 이후 4차례에 걸쳐 공표된 중기방에서 제기된 주요 전력증강사업의 우선순위들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를 보면 1990년대부터 2004년도까지의 중기방에서는 공통적으로 방공능력, 주변 해역 및 해상교통안전확보능력, 작상륙침공대처능력 등을 우선순위로 해서 전력증강을 도모해 왔으나, 2005년 이후의 중기방은 탄도미사일 공격, 케릴라 및 특수부대 침투, 도서부 침략 등 새로운 위협요인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그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를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중기방에서는 중기방 실시시간 중 획득해야 할 군사력의 목표를 <별표>를 통해 밝히고 있다. 2005~2010년간을 대상으로 한 중기방의 별표를 이전의 중기방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을 검토하면, 향후 5년간 육·해·공 자위대의 주력 장비들인 전차, 화포, 장갑차, 호위함, 전투기 등의 구입목표는 양적으로 대폭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요경비 총액도 이전에 비해 9,000억엔 정도 감소되어 종전까지의 상승추세가 꺾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무기체계 획득의 양적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한편, 전투헬기 AH-64D 7기 획득, 이지스시스템 탑재 호위함 3척 획득,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체계, 신전투기, 공중급유수송기 등의 획득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원거리투사능력이 일층 강화되고 있고, 탄도미사일 등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질적인 대응능력 향상이 도모되고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자위대 전체 군사력의 규모 및 향후 무기획득의 중점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초점을 좁혀 개별 자위대가 보유한 군사력 및 향후 군사력 증강의 중점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표 3> 각 중기방 별표에 나타난 무기체계 획득목표<sup>19)</sup>

	1991-95년간 중기방 정비계획	1996-2000년간 중기방 수정계획	2001-2005년간 중기방 정비계획	2005-2010년간 중기방 계획
육상 자위 대	전차 132량 화포 716량 신다연장로켓 36량 장갑차 218량 지대함유도탄 40기 대전차헬기(AH-1S) 20기 수송헬기(CH-47J) 14기 지대공유도탄(호크) 개선용장비 2個群	전차 90량 화포(박격포제외) 40량 신다연장로켓 45량 장갑차 157량 지대함유도탄 24량 대전차헬기(AH-1S) 3기 수송헬기(CH-47JA) 9기 지대공유도탄(호크) 개선용장비 1.75個群	전차 91량 화포(박격포제외) 47량 다연장로켓 18량 장갑차 129량 전투헬기 10량 수송헬기(CH-47JA) 7기 지대공유도탄(호크) 개선용장비 0.25個群 중거리지대공유도탄 1.25個群	전차 49량 화포(박격포제외) 38량 장갑차 104량 전투헬기AH-64D 7기 수송헬기CH-47JA 11기 중거리 지대공유도탄 8개 중대
해상 자위 대	호위함 10척 잠수함 5척 기타 20척 자위함건조계 35척 총배수량 9.6만톤 고정익대잠초계기(P-3C) 8기 대잠헬기(SH-60J) 36기 소해헬기(MH-53E) 1기	호위함 7척 잠수함 5척 기타 18척 자위함건조계 30척 총배수량 9.4만톤 초계헬기(SH-60J) 37기	호위함 5척 잠수함 5척 기타 15척 자위함건조계 25척 총배수량 8.6만톤 초계헬기(SH-60J) 및 개량형) 39기 掃海 및 수송헬기2기	이지스시스템 탑재 호위함 3척 호위함 5척 잠수함 4척 기타 11척 자위함 건조함계 20척 톤수 5.9만톤
항공 자위 대	요격전투기(F-15) 42기 수송기(C-130H) 3기 수송헬기(CH-47J) 2기 조기경계관제기 4기 중등연습기(T-4) 90기 지대공유도탄 페트리어트 1개군	요격전투기(F-15DJ) 4기 지원전투기(F-2) 45기 수송헬기(CH-47J) 4기 중등연습기(T-4) 54기	요격전투기(F-15) 근대화 改修 12기 지원전투기(F-2) 47기 수송헬기(CH-47J) 12기 공중급유 및 국제협력 활동가능 수송기 4기	지대공유도탄 페트리어트 2개군 및 교육소요 전투기 F-15 근대화 개수 26기 전투기 F-2 22기 신 전투기 7기 신 수송기 8기 수송헬기 CH-47J 4기 공중급유수송기 KC-767 1기
소요 경비 총액	22조 7,500억엔 (1990년도 기준)	24조 2,300억엔 (1995년도 기준)	25조 1,600억엔 (2000년도 기준)	24조 2,400억엔 (2004년 가격)

19) 防衛年鑑刊行會 編, 『防衛年鑑: 2001』(防衛年鑑刊行會, 2001), 458-484쪽 등을 참조.

(2) 육상자위대 군사력 평가

<표 1>에 의하면 육상자위대는 현재 8개 사단, 6개 여단, 1개 기갑사단, 그리고 신편되는 중앙즉응집단을 포함한 편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주요 장비로는 전차 600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부대들은 <표 4>에 나타나는

<표 4> 육상자위대 지역별 부대배치 변화추세 및 현황

	1990년 현재	1993년 현재	2002년말 현재	2004년 말 현재	
육 상 자 위 대	북부방면 대(札幌)	4개 사단 (2, 5, 7, 11) 1개 特科團 1개 高射特科團	4개 사단 (2, 5, 7, 11) 제1特科團 제1高射특과단	4개 사단 (2, 5, 7, 11사단) 1개 戰車群 제1特科團 제1 高射特科團	3개 사단(2, 7, 11), 1개 여단(5) 제1戰車群, 제1특과단 제1교사특과단
	동북방면 대(仙臺)	2개 사단 (제6, 9사단) 1개 特科群 1개 高射特科群	2개 사단 (제6, 9사단) 제2特科群 제5高射特科群	2개 사단 (제6, 9사단) 제2特科群 제5高射特科群	2개 사단(6, 9) 제2특과군 제5교사특과군
	동부방면 대(朝霞)	2개 사단 (제1, 12사단) 1개 공정단 1개 高射特科群 제1헬리콥터단	2개 사단 (제1, 12사단) 제1공정단 제2高射特科群 제1헬리콥터단	1개 사단(제1사단) 1개 여단(제12여단) 1개 공정단 1개 高射特科群 1개 헬리콥터단	1개 사단(1) 1개 여단 (12)제1공정단 제2교사특과군 1개 헬리콥터단 중앙즉응집단 신편
	중부방면 대(伊丹)	3개 사단 (제3, 10, 13사단) 제2혼성단 1개 高射特科群	3개 사단 (제3, 10, 13사단) 제2혼성단 제8高射特科群	2개 사단 (제3, 10사단) 1개 여단(제13여단) 제2혼성단 1개 高射特科群	2개 사단(3, 10) 1개 여단(13) 제2혼성단 제8교사특과군
	서부방면 대(健軍)	2개 사단 (제4, 8사단) 제1혼성단 제3特科群 제2高射特科團	2개 사단 (제4, 8사단) 제1혼성단(那覇) 제3特科群 제2高射特科團	2개 사단 (제4, 8사단) 1개 혼성단(那覇) 1개 特科隊 1개 高射特科團	2개 사단(4, 8) 1개 혼성단(15) 제2교사특과단

것처럼 북부, 동북, 동부, 중부, 서남방면대에 각각 2~3개 사단씩 나뉘어 배치되어 있으며, 기갑사단은 북부방면대에, 중앙즉응집단은 동부방면대 지역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일본의 군사력을 구미 국가들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적의 비행기지와 항만을 강습할 수 있는 공정사단, 적의 연안을 기습할 수 있는 해병대 등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상전 수행을 위한 공격적 전투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20)</sup> 그리고 미국 1개 기갑사단은 통상 300대 탱크와 250대 장갑차량으로 구성되는데 비해, 육상자위대의 기갑사단은 200대의 90식 전차와 290대의 장갑차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육상자위대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일종의 특수전 사령부의 성격을 가진 중앙즉응집단의 신편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즉응집단은 게릴라나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헬기부대와 공정단, 그리고 특수작전부대와 화학부대 등을 통합관리하면서 사태 발생시에 각지에 신속히 병력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2004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신편되고 있다.<sup>21)</sup> 예하에는 공정단, 긴급즉응부대, 특수작전부대, 헬기부대, 화학방호부대, 국제활동교육대 등이 배속되며, 전체 규모는 5,000~6,000명에 달할 전망이다.<sup>22)</sup> 최근 발표된 미일동맹 재편계획에 따르면 중앙즉응집단은 미 육군 제1군단이 배치될 예정인 도쿄 근교 자마기지에 2012년도까지 이전하여 미 육군과 공동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sup>23)</sup>

20) 이하 내용은 Jennifer M. Lind, "Pacifism or Passing the Buck?: Testing Theories of Japanese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1(Summer 2004), pp. 96-97 참조.

21) 2004년 3월 29일, 약 300인 규모의 특수작전군이 육상자위대 나라시노 기지에 창설되면서 중앙즉응군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朝日新聞』, 2004년 3월 24일.

22) 防衛廳, 『防衛白書:2005』, 100-101쪽 참조.

23) 『朝日新聞』, 2006년 5월 2일.

이외에 육상자위대는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말을 기해 600인 규모의 중앙정보부대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다. 이 부대는 문헌중심 정보수집보다는 직접 해외 정보원들과 접촉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전문적인 요원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한다.<sup>24)</sup> 아울러 육상자위대는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해외파견 대기요원 2,600명을 2개 방면대에 상시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부대의 신편 계획을 종합적으로 볼 때 육상자위대는 중앙정보부대 신편을 통해 해외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면서, 테러리즘과 비정규전에 대처할 수 있는 특수전부대 및 해외파견부대의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해상자위대 군사력 평가

<표 1>에 의하면 해상자위대는 기동운용 목적의 4개 호위대군, 5개 지방대, 1개 소해대군과 4개 잠수함 부대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전력은 이지스함 4척을 포함한 47척의 호위함 및 16척의 잠수함, 150기의 작전용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다.

<표 5>는 주요 국가의 수상함정 보유실태, 보유 함정의 총톤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5>에 의하면 일본은 비록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수상 함정수에서 미국 및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배수량 총톤수에서 미국 및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권, 그리고 함대 방공능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권에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 해군은 함정 수에서 일본 해군을 앞서지만 소형의 프리게이트함 위주이며 방공능력은 일본보다 떨어진다. 러시아 해군은 항모를 갖고 있고 총톤수에서 일본에 앞서지만, 방공능력이 떨어지고 수상함정의 양적인 규모도 일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6>은 1995년 이후 주요 국가 해군의 함정 획득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4) 『朝日新聞』, 2005년 8월 25일.

<표 5> 주요 국가 해군능력 비교<sup>25)</sup>

	주요 수상함정	함대 방공능력 (해리)	항공모함 (2만톤 이상)	주요 함정 총톤수
미 국	131	높음, 90해리	12	2,971,671
중 국	62	낮음, 13해리	0	169,480
일 본	54	높음, 90해리	0	224,110
프 랑 스	36	중간, 20해리	1	157,250
영 국	35	중간, 25마일	3	201,158
러 시 아	34	중간, 48마일	1	332,800
이 테 리	22	중간, 20마일	0	88,550
독 일	14	중간, 20마일	0	57,360

<표 6> 1995년 이후 주요 국가 해군함정 획득현황<sup>26)</sup>

	항 모	상륙정	구축함 순양함	프리게이트	잠수함	합 계
미 국	2	5	39	0	6	43
일 본	0	3	13	0	9	25
중 국	0	0	2	8	8	18
한 국	0	0	6	0	5	11
영 국	0	3	0	4	2	9
독 일	0	0	0	4	2	6
러 시 아	0	0	0	1	5	6
프 랑 스	0	0	0	2	2	4
이탈리아	0	0	0	0	1	1

25) Jennifer M. Lind, op.cit., p. 100에서 재인용. 저자에 의하면 함대방공능력은 각국 해군이 보유한 최장거리 항공무기, 즉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SAM 시스템인 SM-2 MR의 제원 등으로 산정하였다고 한다.

26) *Ibid.*, p. 114에서 재인용. Lind는 Jane's Fighting Ships 2002을 토대로 이 표를 작성했으며, 냉전기에 주문되고 건조된 함정을 배제하기 위해 1995년을 기점으로 선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표 6>을 보면 탈냉전기 들어와 해상자위대의 전투능력 증강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해상자위대는 현대적 함선의 수량, 방공능력 등에 비추어 영국에 버금가는 세계 2,3위권의 해군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상자위대 전력의 핵심은 기동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4개 호위대군이다. 1개 호위대군은 보통 3,000~7,500톤급의 구축함 8척과 8대의 헬기로 구성되어 소위 8·8함대로 불리워진다. 그 주요임무는 적 잠수함을 상대하는 대잠전이 주목적이었으나, 2004년 방위계획대강에서는 탄도미사일 방어와 무장공작선 침투 대응, 그리고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표 3>에서 나타난 것처럼 향후 해상자위대는 각 호위대군에 신형이시스 구축함 1척, 그리고 1만 3천톤급 경함모급 헬기탑재 구축함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각 호위대군은 경함모급 DDH 1척과 이시스 구축함 2척, 그리고 일반구축함 5척의 함대로 구성되어 더욱 전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자위대의 해양통제능력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해상초계 능력이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도입한 P3C해상초계기를 2005년 시점에 99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종은 하푼 미사일을 장착하고 1,000~1,300해리 반경에서 초계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이 같은 수준의 광역, 정밀방공체제를 갖춘 국가는 일본 이외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상자위대 전력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의 하나가 잠수함 전력이다. 해상자위대는 현재 요코스카와 쿠레기지 등에서 16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척은 정보수집의 임무함으로 선정되어 방공식별권(ADIZ) 직하의 해저를 넘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7)</sup>

27) 『朝日新聞』, 2004년 9월 23일.

#### (4) 항공자위대 군사력 및 우주자산 평가

각국 공군의 전력을 상호 비교하는 기준으로서는 보유한 첨단 전투기의 성능과 대수, 조종사의 능력, 그리고 조기경보통제능력 등을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요 각국의 공군력을 비교한 제니퍼 린드의 연구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을 작성한 린드에 따르면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2000년대 초반 현재 세대 전투기로 F15를 주력기로 180여기 정도 보유하고 있고, 조종사는 연간 비행시간 150시간 정도의 훈련을 지속하고 있고, 항공자위대 보유 조기경보통제시스템도 우수하여 일본 공군력을 미국, 영국, 프랑스에 뒤이은 세계 4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sup>28)</sup> 이러한 평가를 받아들인다면 동북아

<표 7> 주요 국가의 상대적 공군력<sup>29)</sup>

	현재대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연간 조종사 비행시간
미 국	2,267	102	205
러 시 아	1,569	16	20
영 국	400	7	188
프 랑 스	242	18	180
독 일	193	0	150
이탈리아	185	0	-
일 본	180	37	150
중 국	100	4	80

28) 린드에 의하면 러시아는 공군기 수량은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종사 숙련도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29) Jennifer M. Lind, op.cit., p. 98에서 재인용. 이 표의 기록은 2002년도까지의 현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표의 작성에서 제니퍼 린드는 현재대 전투기로서 각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4, F15, F16, F18, 미라주 2000, 토네이도, Su-27, Su-30을 포함시켰다. F22는 차세대 전투기, F-4는 이전세대 전투기로 구분하고 있다. 조기경보통제기에 관해서는 해군의 AEW 자산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연간조종사 비행시간은 공군 조종사의 경우에 한정하였고, 해군 조종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상공에서 항공자위대 전투력은 최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이 작성된 시점 이후에도 항공자위대는 계속 조직과 전투력의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항공자위대의 편제와 배치 현황을 보면 <표 8>과 같이 본토에 3개 항공방면대, 그리고 오키나와에 항공혼성단을 배치하고 있다. 특히 항공총대 사령부는 최근 확정된 주일미군 재편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요코다 기지에 이전하여, 주일 미 제5공군과 공통통합운용조정소를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경우 항공자위대와 주일 미 공군 간에는 정보자산을 공유하면서 양국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위체제에 대한 매우 긴밀한

<표 8> 항공자위대의 편성과 배치 현황

		1990년 현재	1993년 현재	2002년말 현재	2004년 말 현재
항공자위대	북부항공방면대 (三澤)	2개 항공단 2개 高射群 1개 항공경계관 제단	2개 항공단 2개 高射群 1개 항공경계관 제단	2개 항공단 2개 高射群 1개 항공경계관 제단	2개 항공단 (치토세, 미사와) 2개 高射群 1개 항공경계관 제단
	중부항공방면대 (府中)	2개 항공단 2개 高射群 1개 항공경계관 제단	2개 항공단 2개 高射群 1개 항공경계관 제단	2개 항공단 2개 高射群 1개 항공경계관 제단	2개 항공단 (고마쓰, 하쿠리) 2개 高射群 1개 항공경계관 제단
항공총대	서부항공방면대 (飯塚)	2개 항공단 1개 高射群 1개 항공경계관 제단	2개 항공단 1개 高射群 1개 항공경계관 제단	2개 항공단 1개 高射群 1개 항공경계관 제단	2개 항공단 1개 高射群 1개 항공경계관 제단
	남서항공혼성단 (那覇)	1개 항공대 1개 高射群 1개 항공경계관 제대	1개 항공대 1개 고사군 1개 항공경계관 제대	1개 항공대 1개 高射群 1개 항공경계관 제대	1개 항공대 1개 高射群 1개 항공경계관 제대

공동지휘 및 작전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말 현재 202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항공자위대 주력 전투기 F15는 작전반경이 550마일에 달해 타이완 해협 및 한반도,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까지를 공중급유없이 활동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은 혼슈의 하쿠리(百里) 기지에 배치되었던 F15 1개 비행대(약 20기 편성)를 2008년 까지 오키나와 나하기지의 F4 부대와 맞바꿀 것을 결정하였다.<sup>30)</sup> 이는 항공자위대 방위태세가 기존의 북방 중시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서방 중시로 이전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서 주목된다.

항공자위대는 2004년 말 현재 지원전투기 F2를 60여기 보유하고 있고, 100기까지 증강시킬 예정으로 있다. F1 지원전투기는 미·일간의 FSX 공동사업에 의해 적의 일본 본토에 대한 착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F16 전투기를 개조시킨 것으로 2000년도부터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항공자위대는 현재 90여대 보유하고 있는 F4 전투기의 후계기 선정 작업에도 착수하고 있다. 후계기로서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개발하고 스텔스 성능과 초고속 순항능력을 가진 F22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2005~2010년간 중기방에 신형 전투기 7기를 시험적으로 도입한 후에 최종적으로 180기를 조달할 예정으로 있다.<sup>31)</sup>

일본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공중급유기 도입을 2001년도 12월 안전보장회의 각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공중급유능력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sup>32)</sup> 공중급유기 기종으로서는 KC767기가 결정되었고, 2006

30) 『朝日新聞』, 2005년 8월 24일.

31) 『朝日新聞』, 2006년 2월 20일.

32) 2000년 12월 6일, 당시의 사이토 토시즈구(齋藤斗志二) 방위청장관은 취임기자회견에서 공중급유기를 도입해도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朝日新聞』, 2000년 12월 7일. 그러나 김경민 교수는 공중급유기의 도입이 일본이 공격적 대외팽창 전략으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민, 『어디까지 가나 일본 자위대』(아침바다, 2003), 31쪽. 필자는 군사전략의 변화양상을 판단하기 위해선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국제체제와 국가전략의 전반적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

년도에 최초로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자위대 전력과 관련하여 일본의 우주정책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69년에 국회의결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일본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미 국산로켓 개발과 다양한 위성발사에 실적을 가진 일본은 이를 기반으로 2003년 3월 2기의 정찰위성을 발사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다. 이 정찰위성들은 주로 방위청의 요구에 부응하여 북한의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시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화상자료를 내각위성정보센터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3)</sup>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변경하여 방위목적을 위한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주개발기본법을 2007년도를 목표로 제정하려 하고 있고, 지금까지 산발적이었던 우주개발 관련기관도 정부 주도하에 통합할 방침으로 있다.<sup>34)</sup> 이러한 우주정책의 변화가 실현된다면 일본은 우주 자산을 이용한 정보수집 능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고, 현대전의 수행에 불가결한 지휘통제 통신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항공자위대 보유 전력은 첨단화되고 원거리 투사능력을 갖고, 우주정보자산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스스로가 표방하고 있는 전수방위의 원칙상 전력증강에 기본적인 한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공대지 정밀유도무기 보유나 전략폭격기의 보유에는 여전히 자제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향후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전수방위의 원칙이 요구하는 공격용 무기 보유 제한과 첨단 항공전력의 보강이라는 상호 모순적인 두 가지 축에서 지속적으로 항공전력의 보강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다.

33) 『朝日新聞』, 2005년 9월 17일.

34) 『朝日新聞』, 2006년 3월 29일.

## (5) 전략무기 및 미사일 방위체제 평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 특히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전력은 질량 양측면에서 구미 각국에 비해, 그리고 중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은 비대칭적 성격을 갖는 전략무기 측면에서 주요 군사강국에 비해 근본적인 열세를 갖고 있다. 일본은 전수방위 및 비핵3원칙하에 공격형 무기인 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의 인접국가인 중국은 2005년 현재 사정거리 8,000~1만 1,000km의 대륙간탄도탄(ICBM) 동평(東風)5 및 신형 동평31을 30여기 보유하고 있는 등 전략무기체계에 관한 한 세계 3위권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sup>35)</sup>

혹자는 일본이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54기 가동 중이고 보유중인 플루토늄도 해외에 37톤에 달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36)</sup> 일본의 잠재적 핵능력에 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핵무기의 보유는 핵개발 능력 이외에 외교안보 정책결정그룹의 정책의지와 결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한 일본 정책결정그룹은 종전에 표방해온 비핵3원칙을 쉽게 이탈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사 논설위원이며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는 일본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국익 추구상 손실이 된다는 점을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본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에 불리한 지리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둘째, 북한 보유 핵에 대해 미국의 핵억지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핵보유도 억지력에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셋째, 일본이 핵

35)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296 등을 참조.

36) 김경민, 앞의 책, 제2장, “북한의 핵무기, 일본의 핵무기”를 참조.

무장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에서 일본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 오히려 일본의 국익을 제약할 것이고, 넷째,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도 일본이 비핵국가인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sup>37)</sup> 이 같은 정책결정그룹의 비핵화 논리로 인해 일본은 잠재적 핵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핵무기 보유를 실제적으로 결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핵무기 보유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현재 주변국의 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미사일 방위체제 연구개발이다. 미사일 방위체제 개발은 냉전기 미국의 레이건 정권에 의해 착수된 바 있다. 이 시기 구상된 미사일 방위체제는 2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타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미국 정찰위성이 탐지하면, 1단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 탑재 SM3로 요격하고, 만일 이것이 실패하면 제2단계에서 아즉 지상으로 낙하하는 적측 미사일을 착탄 직전의 단계에서 지상배비 미사일 PAC3로 요격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거듭된 미국의 미사일 방위구상 참가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오다가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사건에 영향을 받아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제 연구개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1999년부터 시작된 미일양국의 공동기술연구는 주로 해상배비형 요격미사일에 관하여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적외선 추적장치, 요격미사일을 공기마찰로부터 보호하는 부품인 노즈콘, 제2단계 추진로켓장치, 탄두의 부품 설계 등 4분야에서 주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8)</sup> 한편 신형 SM3의 공동연구가 성과를 거두어 가자 미국은 양국의 공동연구를 공동생산단계로 이행할 것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공동생산단계로 이행하는 것은 일본이 표방해온 무기수출 3원칙과 저촉될 우려가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이 미사일 방위체제와 관련하여 생산개발한 관련 부품을 미국에 공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었다.

37) 船橋洋一, 「北朝鮮核実験と日本核武装」, 『朝日新聞』, 2003년 9월 4일.

38) 『朝日新聞』, 2003년 11월 24일; 『동아일보』, 2004년 10월 8일.

결국 일본 정부는 2005년 12월의 각의를 통해 미일 미사일방위체제 관련 생산 부품은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미국과의 공동개발에 착수할 것을 결정하였다.<sup>39)</sup> 미사일방위체제 공동연구와 개발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종전의 일본 방위정책을 규율해온 기본원칙을 사실상 실효화(失効化)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일 미사일방위체제 공동연구 및 개발의 결과와는 별도로 2003년 12월, 이미 미국이 개발해 2004년도에 실전배치예정이었던 해상배치형 SM3와 지대공미사일 PAC3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sup>40)</sup> 이는 2003년도에 발발한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일본 정부가 시급히 본토 영공 방위를 위한 미사일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일본 정부는 2006년도에 이들 장비를 도입하여 2007년도까지 지대공유도탄 PAC3는 우선 수도권에 배치하고, 해상배치형 SM3는 이지스함에 탑재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사세보를 모함으로 하는 이지스함 공고(金剛)호가 2007년도에 MD 1번함으로 개조될 예정으로 있다.<sup>41)</sup> 일본 정부는 당분간은 2007년 배치 예정인 SM3와 PAC3의 체제로 미사일 방위를 수행하고, 미·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MD의 결과물이 실용화된다면 후속 MD체제로 실전배치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sup>42)</sup> <표 1>에 나타난 2004년 방위계획대강을 보게 된다면 향후 일본의 방위정책상 중점은 이러한 미사일 방위체제의 공동개발과 구축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9) 『朝日新聞』, 2005년 12월 15일, 12월 16일 기사 참조.

40) 『朝日新聞』, 2003년 12월 20일.

41) 일본은 축차적으로 이지스함 4척 전부에 SM3를 탑재하고, 4개 고사포 부대에 PAC3를 배치할 계획이다. 『朝日新聞』, 2003년 8월 30일 및 동 신문 2004년 12월 14일자 기사 참조.

42) 미·일이 공동연구하고 있는 미사일 방위체제는 현행의 SM3보다 대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종류와 속도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朝日新聞』, 2005년 9월 1일.

## (6) 합동군제 전환 및 C4I체제 평가

현대전의 수행에 있어 정확한 정보수집에 바탕한 지휘부와 야전부대간의 일관되고 신속한 지휘통제시스템의 구축은 전승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걸프 전쟁과 이라크전쟁 개전 초기에 미국 등의 연합군이 이라크 전쟁지휘부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위한 전략폭격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인 것은 지휘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한 소산에 다름아니다. 21세기 들어와 각국간에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방개혁의 성패도 정확한 정보수집능력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휘통제시스템의 구축에 관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수방위를 표명하고 있는 일본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보수집 자산의 확충과 지휘통제시스템의 구축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탈냉전기의 일본 자위대는 정보전력의 확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04년 10월 발표된 <안정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는 일본의 총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정보수집과 분석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43)</sup> 이에 따르면 새로운 위기의 양상이 다양하고도 예측 곤란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제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신기술을 구사한 정보체제를 확립하고, 관계 각 조직이 정보를 공유하는 태세를 구축할 뿐 아니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자위대는 정보수집 자산을 다원화하고 정보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원의 확충에 힘쓰고 있다.

정보수집 자산의 다원화를 보여주는 실례로서는 앞서 소개하였듯이 2003년도부터 운용하기 시작한 정찰위성체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2기의 정찰위성은 일본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되는 국가의 군사시설을 집중

43) 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 「未来への安全保障・防衛力ビジョン」(2004. 10).

적으로 정찰하면서 귀중한 화상정보를 내각위성정보센터에 송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위청은 향후 추가적으로 2기의 정찰위성을 발사하여 총 4기의 정찰위성을 운용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예컨대 북한 전역에 대한 24시간 정찰이 가능하다고 한다.<sup>44)</sup> 정보관련 조직의 확충에 관해서는 앞서 육상자위대가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600인 규모의 중앙정보부대를 2006년도 말에 신설할 예정이라는 사실은 소개하였다. 그 외에도 1997년 창설된 정보본부의 규모와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애초에 1,600인 체제로 발족한 정보본부는 2004년 말 현재 2,175명 규모에까지 확장되었으며, 2006년 3월에 실시된 조직개편에서는 통합막료회의 산하 조직에서 직접 방위청 직속부대로 위상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sup>45)</sup> 일본내에서는 911 이후인 2004년에 미국에서 창설된 국가정보위원회(DNI)와 유사하게 일본판 통합정보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는 구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sup>46)</sup>

보다 효율적인 군령의 실시를 위해 일본내에서는 특히 탈냉전기 이후 합동형 군제로의 이행이 요청되어 왔었다. 종전의 자위대는 육·해·공 자위대 및 통합막료회의가 병렬적인 관계였고, 방위청 장관이 이들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지휘체계는 전전의 육해군 대립을 방불케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고, 유사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전력발휘가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었다. 유사시 전력의 통합발휘가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다.<sup>47)</sup> 이러한 기존 지휘체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자위대는 2006년 3월 27일을 기해 합동형 군제로 전환하였다. 즉 기존의 통합막료회의를 대체하여 통합막료감부가 설치되었고, 이 조직의 장인 통합막료장이 방위청장관의 지휘를 받아 육·해·공 자위대에 군령권을 행

44) 防衛廳 編, 『防衛白書:2003』(防衛廳, 2003), 132쪽.

45) 防衛廳, 『防衛白書:2005』(防衛廳, 2005), 126쪽 참조. 격상된 정보본부 예하에는 계획부, 분석부, 통합정보부, 화상지리부, 전파부, 6개 통신소가 각각 설치되었다.

46) 민주당 전 대표였던 마에하라 세이시(前原誠司)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47) 그러한 비판의 하나로서 防衛庁防衛研究所編, 『東アジア戦略概観2003』(防衛庁防衛研究所, 2003), 249쪽.

사하는 지휘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sup>48)</sup> 통합막료감부는 탄도미사일 대처와 원격지 도서방위, 그리고 대규모 재해 등의 사태에 대비해 육·해·공 3자위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주어졌다.

합동형 군제로의 이행과 병행하여 자위대는 첨단지휘통제 시스템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군사엘리트들은 RMA의 실체를 통신정보 기술을 응용하여 기존의 무기체계와 그 능력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1996년에 미국이 전지구통제시스템(Global Command and Control System)을 완성시키고, 이를 기존의 전역용 지휘통제시스템과 접속시킴으로써 작전지역의 지휘관이나 동맹군 사령관에게 리얼타임으로 위성정보 및 영상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된 시스템의 구축에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으로서 군사적 자율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미국의 지휘통제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되어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영국형의 체제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주권 및 군사적 자율성을 중시하여 독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미국과의 상호호환적인 정보시스템의 이점(利點)은 포기하는 프랑스형 지휘통제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sup>49)</sup>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보다 대등한 동맹관계 구축을 위해 한편으로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독자적인 지휘통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정보공유를 추구해 나가는 중간의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7월, 방위청은 자위대의 중앙사령부와 전선의 함정 및 항공기를 위성통신망으로 연결해 데이터의 대량 송수신이 가능한 지휘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sup>50)</sup> 이러한 정보통신망은 예컨대 일본에 접근하는 적국의 전투기 정보

48) 防衛廳, 『防衛白書:2005』(防衛廳, 2005), 125쪽 참조.

49) 이러한 문제의식은 松村昌広, 「日本のRMA政策を考える」, 『国際安全保障』 第29巻第2号(2001年9月)를 참조.

50) 『毎日新聞』, 2003년 7월 29일과 『朝日新聞』 2004년 1월 8일자 기사 참조. 일본 정부는 2005년도 예산에 이 같은 목적의 위성통신망 구축 예산으로 176억엔을 요청한 바 있다.

를 리얼타임으로 3자위대가 공유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고, 혹은 대테러 전쟁 수행을 위해 인도양 등에 파견되어 있는 해상자위대 함정을 본국 통합 막료감부에서 효율적으로 지휘하는 핵심적인 장치가 될 것이다. 2006년 5월 1일 미·일 양국간의 안보협의위원회에서 합의된 바, 미 제5공군과 항공자위대 총대사령부가 통합근무운용조정소를 설치하게 된다면 미·일 양국은 상호의 발달된 정보수집자산과 첨단 지휘통제시스템도 공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5. 맺 음 말

이상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육·해·공 자위대 전력과 우주자산, 전략무기 체계와 미사일방위체계, 정보자산 및 지휘통제시스템으로 나누어 평가해보았다. 일본의 군사력은 특히 해상과 항공자위대의 전력은 기존 연구들에서 평가되고 있는 것처럼 세계 2~4위권의 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칭전력으로서의 전략무기체계에서는 비핵3원칙이 여전히 준수되고 있어서 핵보유국들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전략무기 체계에서의 열세를 동맹국인 미국과의 미사일방위체계 공동개발을 통해 보완해 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합동형 군제로의 전환과 위성통신망을 사용한 지휘통제시스템의 구축 노력, 위성자산을 이용한 정보자산의 확충 등을 통해 자국의 군사기술 수준을 높이고 전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평가결과를 통해 볼 때 일본이 국내의 반군사주의 문화로 인해 주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학설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이 해·공군의 재래식 전력 및 정보

『朝日新聞』, 2004년 9월 1일.

전력, 지휘통제시스템에서 첨단 수준을 가진 군사강국의 반열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대외팽창이 가능한 군국주의 형의 군사대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과장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일본은 미사일 방위체계 건설 및 여타 부문에 있어 미일동맹의 견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기술적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3원칙 및 NPT체제라는 국내의 규범에 따라 핵무기 개발을 단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21세기 일본은 현실주의적 외교안보정책 노선이 정착되면서 기존의 군사체제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있으나,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국내적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군사적 강국임이 분명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등과 같은 전략무기 보유국가들에 비해서는 비대칭적 열세의 전력구조를 갖고 있는 상대적 군사강국의 이중적 위상을 갖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1965년 우리와 국교를 체결한 이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우방국의 관계를 맺어왔고,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 지나친 우려를 표명하는 것보다는 21세기 접어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전력증강정책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국가이익 달성 및 전력증강 방향에 유용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내실이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일본의 군사능력 강화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어떻게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찾는 보다 현명한 대응전략이 앞으로 요구된다.

(원고투고일 : 2006. 4. 3, 심사완료일 : 2006. 7. 25)

주제어 : 일본, 안보전략, 군사력, 군국주의, 21세기

<ABSTRACT>

## Japan's Security Strategy and Military Power in the 21st Century

Park, Young-june

Military power is an important tool to implement a national strategy. Each country has strived to acquire a sufficient military power to defend its national sovereignty and territory. As *Sun Tsu* mentioned about 2500 years ago, it has been an important task for national strategists to evaluate other country's military power, and thus to discern the manifest and potential threat to their country.

Japan's military power has been a great concern in Korea for a long time because of its dismal memory of colonial rule and militarism of prewar Japan. Especially territorial disputes on *Dokdo* Island between Korea and Japan ignited strong anti-Japanese sentiment among the Korean people. There grows suspicion that Japan might return to militarism again.

So it became difficult to assess the Japanese security strategy and military power with a balanced view. But it would be inevitable to evaluate neighboring country's military power correctly as an initial step to design a balanced national military strategy.

With such a purpose, I tried to evaluate the Japanese military power, introducing Japan's security strategy, SDF's arms systems, and military reforms. Especially I explained the SDF's military reforms focusing on the adoption of C<sup>4</sup>I system and missile defense system. Based on this research, I reached an conclusion that Japan's military system has been changed

through the post-cold war era. Japan has departed from its so-called pacifist national image which had been characterized Japan's security strategy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But it does not mean that Japan will return to militarism again. Japan is on the way to a normal state which will be different from the pacifist state or militarism. Growing military power represents a Japan's willing to be a normal state which will enlarge its security role over the world. It would be important task for us how to respond the Japan's change and how to utilize its change to maximize our national interest.

Key Words : Japan, Security Strategy, Military Power, Militarism, 21st Century

K C I